



보도시점 2026. 3. 3.(화) **배포 시** 배포 2026. 3. 3.(화)
3. 4.(수) 조간

지역단위 밭작물(노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 지구 선정!

- 배추·무·대파·양파·마늘·감자 등 주산지 중심 500ha 내외 대규모 생산지구 5개소 선정
- 시설원예 육성지구 7개소도 선정... 전방위적 스마트농업 생태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노지 육성지구)에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노지 육성지구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농산물 공급안정과 밭농업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마련되었다.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된 예비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 등에 대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지 육성지구는 개소당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수급과 밀접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 대상으로 500ha 내외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용수·비료 공급 시스템, 병해충 사전 감시 등 컨소시엄이 필요한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선정된 솔루션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시설, 무선통신망, 기상관측장비 등의 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 컨설팅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더불어, 농산물 선별·포장·가공·유통을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 센터,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통합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노지 분야에 앞서 시설원예 분야에서도 총 7개소가 ‘2026년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됐다. 그중 5개소는 최장 10년 임대 가능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원되는 ‘정부지원형’(충남 금산, 전북 진안, 전남 무안·장흥, 경북 상주)으로 청년농의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회 확대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함께 선정된 ‘지구지정형’ 2개소(충남 당진, 전북 김제)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원되지 않지만,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시설 및 부지의 직접계약 통한 관리위탁과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의 특례혜택으로 다양한 모델의 육성지구 조성 사례 확산을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노지·시설원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노지·시설원예 각각 전국 30개소 이상으로 확산해 지역단위 스마트농업 거점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금년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기후 위기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2411)
		담당자	사무관	이강권 (044-201-2423)

□ (지구지정) 시·도(시·군)에서 생산혁신+소득제고를 위한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제출 → 농식품부 선정(공모)

① (생산지구) 생산 조직화, 재배 밀집도, 기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핵심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단계적 확대

* 95억원/개소 : 스마트 기반조성(16) + 솔루션 보급(76) + 기술역량 제고(3)

* 재배농가 밀집도가 높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500ha 내외까지 단계적 확대

* 여러 개 읍·면으로 구성 시, 가급적 인접 읍·면으로 지구 조성 추진

② (연계지구) 제반여건(지역, 품목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 APC, 가공시설, 스마트농업 관련 솔루션·기자재 기업 등 전후방산업의 조합 배치

* 지방정부 자체 예산 수립 또는 민간투자, 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 '연계지구' 면적은 APC, 가공시설 등 연계 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협의 조정 (가능한 기존 시설 연계 활용 ← 중복투자 방지)

<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체계 >



- **(사업목적)** 임대형 스마트팜 및 가공·유통 등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 → 지역단위 확산 거점 마련
 - 장기 임대팜(최대 10년)을 통해 청년농의 창업자금 마련* 지원
 - * 교육(보육센터 20개월) → 재배경험 확대(단기 임대팜 3년) → 자금 마련(장기 임대팜 5+5년)
 - 지방정부가 자체조성계획을 통해 스마트 APC, 가공시설 등 연계 조성
- **(사업내용)** ①임대형 스마트팜 + 제도적 혜택을 모두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과 ②제도적 혜택만 지원하는 '지구 지정형'으로 구분
 - ① **(정부 지원형)** 임대형 스마트팜(부지 5ha 이상, 스마트온실 4ha 이상) + 전후방 산업 연계 조성(부지 5ha 이상, 스마트 APC, 가공시설 등)
 - 임대형 스마트팜은 정부 재정지원(200억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3년, 지특회계) + 전후방 산업*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성계획 수립
 - * 전후방 산업 재원 조달 : 지방정부 예산, 민간투자 유치, 정부 사업 공모 등 활용
 - ② **(지구 지정형)**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 인·허가 의제 및 공유재산법 특례 혜택* 부여 **임대형 스마트팜 미지원**
 - * 인·허가 의제(관련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 장기임대, 영구시설물축조 등)
- **(조성주체 및 사업기간)** 시·도 및 시·군, 3년 이내
 - * 부지는 지자체 확보 원칙이나, '전후방 산업 연계지구' 부지는 사업시행 주체가 확보 가능
- **(추진사항 및 계획)** '26년 총 7개소 선정*('30년까지 30개소 목표)
 - * 선정결과 : ('25: 5개소) 정부지원형 4개소(충남 홍성, 전북 남원, 전남 장성, 경남 거창), 지구지정형 1개소(전남 고흥) → ('26: 7개소) 정부지원형 5개소(전북 진안, 전남 무안, 전남 장흥, 충남 금산, 경북 상주), 지구지정형 2개소(전북 김제, 충남 당진)